



중국발 황사 등으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을 보인 12일 오후, 광주 광산구 어등산 중턱에서 바라본 광주 도심이 뿌옇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최악의 미세먼지 ... 오늘도 '매우나쁨'

광주, 제한급수 위기 넘겼다

동북댐 저수율 20%대 회복
장마 시즌 8월까지 급수 가능
광주시 대체 수원 확보 등 효과
4월 수돗물 절감률 10%대
시민 절수운동 실천 계속해야

광주시와 시민이 한데 뭉쳐 30여 년만에 찾아온 제한급수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

광주시의 다양한 상수원 확보 노력과 함께, 위기 때마다 연대정신을 발휘해 온 광주시민의 DNA가 '극한 절수운동'으로 이어지면서 8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12일 광주시와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한때 10%대로 떨어졌던 주요 식수원인 동북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이 각각 22.34%, 22.38%까지 올라왔다.

저수율이 7% 이하로 떨어지면 제한급수 대상이 되는데, 하루 평균 0.1% 정도씩 저수율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극한상황을 적용하더라도, 시민들이 최대 150일(5개월) 정도는 무리 없이 버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지금과 같은 시민의 절수 운동이 유지되는 조건에서이다.

지난 4-5일 동북댐 인근을 기준으로 36mm 안팎의 비가 내린 것을 제외하고 그동안 큰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한급수 위기를 극복한

배경으로는 광주시와 시민의 공동 노력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광주 시민들은 물 사용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봄 시즌을 맞았지만, 오히려 물 사용량을 더 줄여 나가고 있다.

광주시민의 전년동기 대비 수돗물 절감률을 보면, 본격적인 절수운동을 시작한 지난해 10월 기준 하루 평균 절감률은 1.0%에 불과했으나, 올 3월 첫째 주 9.1%를 기록한 데 이어 4월 첫째 주에는 처음으로 10%대(10.2%)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하루 6000톤의 수돗물을 절감했다면, 4월 현재 10배에 가까운 5만톤씩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민의 하루 평균 수돗물 사용량은 45만톤 안팎이다.

시민의 노력과 함께 제한급수를 막기 위한 광주시의 전방위적 물 수요 관리 정책도 빛을 내고 있다.

시는 일단 시민의 물 절약에 돕기 위해 수돗물 감량 요금 감면 정책 등 다양한 물 절약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파트 13만여 세대와 단독주택 2만여 세대, 다량급수 사업장 900여 세대를 대상으로 계량기 수압조절 등을 유도해 상당한 절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또 시민들이 물 절약에 적극 동참할지라도 절감할 수 있는 수돗물이 하루 평균 5만톤을 넘기 어려운 점을 고려, 비상 대체수원 개발에도 나서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35억원을 들여 영산강 하천수 비상공급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미 지난 3월부터 하루 3만톤씩의 영산강물을 수돗물로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 오는 5월에는 5만톤까지 늘릴 계

획이다. 사전에 용연정수장 내에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한 덕분에 영산강물을 깨끗한 수돗물로 정화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 밖에도 동북호 주변 지하수 개발 사업을 통해 하루 최대 2만톤의 용수를 추가 확보했으며, 댐의 가장 밑부분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물은 '사수(死水)' 확보 사업을 통해 조만간 350만톤의 용수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정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의 적

극적인 물 절약 실천과 다양한 용수 확보 정책 등이 성공하면서 일단 제한급수라는 최악의 위기를 넘긴 듯 하다"면서도 "기후 변화에 따라 매년 가뭄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생활 속 물 절약 운동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가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서 마지막으로 제한 급수가 시행된 시기는 1992년 12월 21일부터 1993년 6월 1일까지 163일간 이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야, SOC·R&D 사업 '예타 완화'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여야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SOC 사업의 범위를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로 명문화했다.

새 예타 기준은 SOC·R&D 사업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이 유지된다.

현재 예타 대상 사업은 SOC·R&D 외에 지능정보화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해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등 신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총사업비 1천억원이 넘지 않는 SOC·R&D 사업의 경우 사업성을 따지는 예타 없이 신속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대신 소관 부처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학폭가해 처분 결과 대입전형 의무 반영

학생부 보존 2년→4년 연장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위주인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의무화는 아니더라도 내년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일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 사항을 정시에서 고려할 전망이다.

중대한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대입은 물론 더 나아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파장을 계기로 정부는 11년 만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입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학폭위 조치 사항이 평가에 고려되는데, 모든 전형에 학폭위 조치 사항이 반영된다는 의미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각 대학이 따라야 하는 대입전형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마련한다.

입학일 기준으로 2년 6개월 전에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8월 공개될 예정이다.

현 고2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이미 지난해 발표됐기 때문에 학폭위 조치 반영을 의무화할 수단이 없다.

다만 최근 학폭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위 조치를 자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학폭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가·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기간은 3월에서 7월 이내로 연장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시·군 알록달록 '색깔 마케팅'	▶2면
나주, 외국인 노동자 일당 11만원 이하로?	▶6면
KIA 타이거즈, 부상에 '울상'	▶18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영문대학교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약속하신 공약입니다.

간호법은 2022년 4월 27일,
여야 합의로 마련되었습니다.

간호법은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윤석열 공약위키 간호 개선방안

- 1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
- 2 초고령사회 대비 지역사회 통합간호·돌봄체계 구축
- 3 간호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 4 저출산·학령인구 감소 대비 간호학사 특별과정 신설추진
- 5 ICT기반 일차의료·장기요양 방문간호 연계체계 구축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국제라이온스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약사협회,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권익포럼, 재향군인회여성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신장애인권연대, 청년디딤돌,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등 1,300여 단체(가나다 순)